

이성을 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규제 철폐 주장의 속내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기도에서는 8월부터 한 달 여 동안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청, 군청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에는 서명용지가 비치되어 민원인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준 공무원인 통장들은 서명용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도 서명지가 놓여지고, 농협중앙회 은행창구에도 서명지가 비치되어 경기도 전역이 수도권규제철폐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양상이다.

이렇듯 경기도 전체 행정기관이 동원되어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민간단체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진행하는 민간주도의 서명운동으로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다며, 수도권규제철폐 1천만 서명운동이 마치 순수한 민간의 요구인양 치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 수도권규제철폐 1천만인 서명운동 협조의뢰 ” 라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명의의 공문을 행정체계를 통해 각 시군구로 하달하여 서명운동의 배후에 경기도와 김문수지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김문수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정치인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수도권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관제 쟁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8월 22일 경기도 광주에서는 [팔당호 중첩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쟁기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 26일에는 의정부에서 [군사시설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쟁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몇몇 시군에서는 서명과 관련하여 동별 할당량을 정해 서명을 압박하고, 담당부서 직원이 부서장의 발언을 근거로 “ 서명 실적이 저조한 부서는 자세의 문제로 반드시 지적할 사항이다.” 라며 공무원을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이성을 잃은 경기도의 수도권규제철폐 요구의 중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있다.

지난 7월 21일,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를 인구 500만 명 내외의 7대(5+2) 광역경제권과 4대 초 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고, 그 중심기조로 역대정권과 참여정부의 전략인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 를 다시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독설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은망덕한 행위 ” 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규제 철폐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국공산당도 하지 않는 일” , “ 수도권규제는 망국정책 ” , 팔당상수원규제는 “ 떼놈 보다 못한 짓 ” 이라는 등 수많은 독설이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강연과 연설로 공식석상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발언에 뒤이어 소위 [수도권규제철폐 경기도민 1천만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중심론을 내세우며 거들고 나섰고, 수도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수도권규제에 관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의 자신을 향한 독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리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내년 초부터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 며 8월 26일 수도권 정치인들과의 조찬간담회를 갖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9월 19일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3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약 100km²(330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부 장관마저 “그린벨트는 성역이 아니다.” 라며 자신의 본분을 잃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수도권 정치인의 [수도권규제 철폐] 주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역설적이게도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핵심 내용에는 수도권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관제 쟁기대회에서 중심요구는 [팔당상수원 규제완화]와 [군사보호구역 축소와 규제완화]였다. 여기에 더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그린 없는 그린벨트의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경기도에서 철폐를 요구하는 핵심 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소위 수도권 규제가 아닌 것이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의 핵심사례로 주장하는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문제도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상수원에 구리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문제로 증설이 불가능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IMF 이후 계속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도권만의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13개 첨단업종과 외자유치기업의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예외로 인정되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 중이고, 수원과 화성에는 5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 공장 증설이 진행 중이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4년제 대학 신설, 별도공단 설치 등 수도권규제로부터 예외가 인정되는 주변지역이 경기도 전체 면적의 51%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파주에 이화여대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규제가 예외로 인정되는 황해 경제자유구역도 계획이 확정되어 경기도의 평택시와 화성시가 핵심지역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부추기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계획을 합산하면 2020년 경기도의 인구는 1780만 명으로 현재 인구 1080만 명 보다 700만 명이 늘어나게 되어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기도는 더 나아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구릉지와 산지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철폐라는 허울을 내세워 수도권의 환경과 생명수를 보존해온 모든 법과 규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수도권규제 철폐라는 제목만 적힌 서명용지로 경기도민의 서

명을 강요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에 2300만 수도권주민과 경기도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규제 완화가 있음을 숨기고 있는 경기도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경기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수도권 시민의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